

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현상과 기상이변, 사막화 현상의 진행과 극지방의 해빙, 해수면 상승과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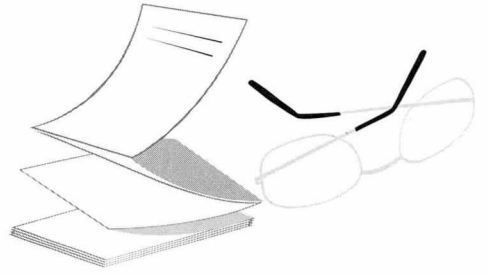
기본 원칙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각국은 세계 기후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능력에 따라 차등적 책임을 지며 선진국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2.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등 특수국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 3. 기후변화의 원인과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사전 조치를 취하고 비용을 분담한다. 4.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개발권역을 설정한다. 5. 기후변화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국가간 무역에서 불공정한 차별이나 부당한 제한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 협약은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것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의 의미하고 결국 개발·성장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협약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크게 엇갈려 있다. 1993년 3월 21일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내용은 기본원칙,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로 돼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인 온실 가스 규제문제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메탄 가스, 이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를 각국이 언제까지 얼마를 줄일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문제는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협약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재정을 지원하고 환경기술을 이전하는 문제를 담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체결국은 염화불화탄소(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 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하여 이를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시행 결과를 선진국은 협약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개발도상국은 3년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개발도상국의 의무사항은 선진국의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참가한 각 나라는 협상의 기본원칙 및 대응전략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유럽 연합(EU) 등 선진국은 가급적 협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선진국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개발권 확보 등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당사국 회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규정농도(N 농도 = 규정농도)

$g\text{당량}/\ell = eq/\ell$ 즉 IL 용액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그람당량수 O.K

낭핵종

한 핵종이 방사성 붕괴를 한 결과 생기는 핵종을 낭핵종이라 한다. 낭핵종도 방사성을 띠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시 붕괴를 거듭하므로 피폭에 대해 연구할 때에는 낭핵종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난류

액체의 속도가 커지면, 유체의 입자가 서로 뒤섞여 유선이 형클어진다. 이 상태를 난류라 하고, 일반적으로 레이놀즈 수가 증가하여 4,000 이상의 값이 되면 층류에서 난류로 옮겨간다.

냉각수

핵발전소는 약 2-4%의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하고 냉각재를 사용하여 노심을 일정 온도로 유지하면서 서서히 핵분열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는다. 이때 냉각재로는 보통 물을 쓰는데 이 물을 냉각수라 한다. 원자로 용기 내부는 물이 원자로 내에서 약 350도의 고온에서도 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약 130-150기압의 높은 압력을 가한다.

납중독

일반 성인은 1일 평균 0.3-1.0mg의 납을 섭취하고 있지만, 1.0 mg을 넘으면 배설량을 넘어서 체내에 축적되어 만성중독을 일으킨다. 폐나 소화기, 피부 등을 통하여 흡수되어 피로, 변비, 두통, 관절염, 근육마비, 뇌 이상 증상 등을 일으키므로 조기진단이 필요하다.

노킹

가솔린 기관의 실린더 내에서 그 연소상태에 따라 두드리는 소리(노크)를 내는 현상을 말하며, 미연소 가스의 2차적 자연발화에 의해 국부적인 압력 상승으로 가스 진동과 그에 따른 금속성 소음을 일으키고, 그 결과 열효율이 저하하여 출력을 감소시킨다.